



기분좋은 변화,
활짝웃는 아산

2015년 염치읍 종합감사 결과



감사담당관

I. 감사실시 개요

□ 감 사 개 요

- 감사대상기관 : 염치읍
- 감 사 기 간 : 2015. 5. 12. ~ 5. 14.(3일간)
- 감 사 범 위 : 2012. 6. 1. ~ 감사일 현재
- 감 사 인 원 : 열린감사팀장 외 5인

II. 감 사 결 과

□ 주민자치위원회 회계처리 절차이행 관련

가. 위법·부당 내용

-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운영) 및 제10조(사용료 등)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경비의 집행) 및 제14조(수당 등 지급)에 따르면 예산의 지출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예산에 한정하여 지출할 수 있고 회계처리는 지출원인이 발생하면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과 내역을 기재하고 결재를 받은 후에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임을 확인하여 계좌입금하여야 합니다.
- 또한 「아산시 재무회계 규칙」 제140조(계산서 등의 수취 및 세무관서 제출)의 규정에 의하면 회계업무 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 전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도 회계업무 처리 절차 이행을 소홀이 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처분지시 내용

-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월액여비 지급 관련

가. 위법·부당내용

- 『지방재정법』 제71조(지급 명령의 제한)의 규정에 의하면 지출원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지급 명령을 할 수 없으며,

『아산시 재무회계 규칙』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제①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③항 지출원(일상경비 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 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함에도 월액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개인 및 모임단체의 재무통장에 수당을 공제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처분지시 내용

-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월액여비 지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관련

가. 위법·부당내용

-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및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사업지침」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리적·경제적·교육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하여 부담경감을 도모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 및 양육인, 임업인, 어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함)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및 자녀, 손자녀, 조카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수혜 받는 농업인은 그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 그러함에도 아산시미래장학회 장학금 지원을 받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중복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처분지시 내용

-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을 추진 하시고 중복 지급한 장학금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 세출예산 집행과목 관련

가.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안전행정부훈령 제12호) 제6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에 의하면 세출 예산은 성질별로 분류하여 편성하도록 하였으며, 「아산시재무회계규칙」 제9조 등에 의거 세출 예산은 과목별 집행계획을 정확히 산정 편성 집행 하여야 하며, 예산 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이용 또는 전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호, 2015. 1. 22.)에 의하면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일직비 등),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로 집행할 수 있고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로 집행하여야 하며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는 집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그러함에도 복사용지 구입 등에 대하여 사무 관리비로 지급하지 않고 공공운영비로 집행 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처분지시 내용

- 염치읍장은 『아산시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 하시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결제통장 관련

가. 위법·부당내용

- 『지방재정법』 제71조(지급 명령의 제한)의 규정에 의하면 지출원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지급 명령을 할 수 없으며,

『아산시 재무회계 규칙』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③항 지출원(일상경비 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 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함에도 신용카드결제 통장에 결제와 관련이 없는 다른 부서의 오류입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발생한 현금에 대하여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처분지시 내용

- 염치읍장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업무를 추진하시고 세입처리 등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계약 업무처리 관련

가. 위법·부당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공사에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종합공사 및 공사에정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전문공사는 같은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만 건설업을 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중방리 외 2개소 배수로정비공사”에 대하여 공사에정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전문공사이며, 주된 공사가 벤치플룸관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전문건설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종합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 등록한 업체와 수의계약

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처분지시 내용

- 염치읍장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추진 시 관련서류 접수업무 관련

가. 위법·부당내용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에 따라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하며, 제5호에 따라 “서명”이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제10조에 따라 결재, 위임전결 또는 대결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전자문서는 제외한다)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 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제6조 제1항에 따라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 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제11조(공사관련 서류 검토·보고) 제1항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착공신고서, 각종 계획서, 준공 설계도서 등)를 확인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소하천 준설공사”등에 대하여 대금 청구서를 접수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반공투사 진혼탑 경내 조형소나무 식재공사” 준공계 지연접수(2일), “석정1리 배수로 정비공사” 착공계 지연접수(1일)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처분지시 내용

- 염치읍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정산 관련

가. 위법·부당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당사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주자는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출한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건설공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함에도, “염성2리 농로포장공사”등에 대하여 준공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소요비용 지출내역이 제출되지 않아 감액 정산하여야 하는데도 확인업무를 소홀히 하여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처분지시 내용

- 염치읍장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과다 지급액은 회수하시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정산 관련

가.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0호, 2015. 4. 10.) 제2장에 따르면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법령 및 원가계산 자료를 적용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7호, 2014.10.22.)제3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고, 제7조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제8조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함에도, “읍사무소 공공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하여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공사원가계산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하게 계상하여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처분지시 내용

- 염치읍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먹는 물 수질검사 입회 및 대장관리 업무 관련

가. 위법·부당내용

- 「아산시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조례」 제5조 및 「아산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조례」 제6조제2항에 의거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시 관계공무원이 입회하고 읍·면·동장이 확인토록 되어있습니다.
- 그러함에도 2012년과 2013년 33건에 대하여 염치읍장의 확인을 득하지 아니하였으며, 2014년의 경우 봉인에 관한 사항이 2013년에 기재되었으며, 이 또한 염치읍장의 확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산시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조례」 및 「아산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조례」에서 명시한 채수시 입회 및 봉인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처분지시 내용

- 「아산시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조례」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수질검사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감기동대원 채용업무 관련

가. 위법·부당내용

- 염치읍에서는 산감기동대원 채용을 위하여 산감기동대 모집공고 후 해당 공고문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에 합격하여 선발된 자에게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받아, 산감기동대원으로서의 임무 수행 능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지를 판단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그러함에도, 2013년 상반기 산감기동대 채용업무를 수행하면서 모집공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하반기에도 근로계약서 및 채용신체검사서를 징구 및 확인하지 않았으며, 산림이 없는 지역의 인원을 채용하지 않도록 산림녹지과-431(2013.1.10)호로 선발계획이 통보 되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기형(온양3동)을 산감기동대원으로 채용하였으며, 2014년, 2015년 공고시에는 기초체력검증을 위한 시험을 실시한다고 명시하였으나 기초체력시험 결과도 없으며 이를 토대로 채용하였다는 근거도 없이 산감기동대원을 채용하였고, 채용당시 고령(78세)의 응시자의 체력을 검증하지 아니하고 산감기동대원으로 채용하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처분지시 내용

- 염치읍장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산감기동대 채용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 업무 관련

가. 위법·부당내용

- 「민방위기본법」 제7조(지역민방위협의회)에 따라 민방위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면·동장 소속으로 읍·면·동 민방위협의회를 두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민방위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5명 이상 8명이하로 구성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또한, 같은법 제20조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표나 그 밖에

민방위 대원 편성대상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직권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하고, 매년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려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함에도 영치읍에서는 2013년에 지역민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다른해에는 지역민방위협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하였으며, 2012년부터 2013년도까지 민방위대 신규 편성 인원에 대하여 민방위대원 편성사실과 임무 등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나. 처분지시 내용

- 영치읍장은 「민방위기본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민방위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 자재관리 관련

가. 위법·부당내용

- 『민방위기본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 민방위관련 물자,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비축, 설치, 정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방위장비대장 및 현황판이 미관리되었으며, 기재된 민방위장비와 현황의 장비가 불일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장비·물자)에 의거 민방위 준비를 위한 필요물자를 갖추어야 하나 시행규칙에 명기된 물자 등을 미 구비하였으며, 미 구비 및 노후된 물자(방독면 등)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1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에 의거 비용을 지원받아 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장비·물자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그럼에도 민방위 준비를 위한 필요 물자 및 장비 등이 미 구비되어 있어 시설·장비·물자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처분지시 내용

- 영치읍장은 「민방위기본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민방위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공원화 인부사역업무 관련

가. 위법·부당내용

- 국토공원화 인부사역 결의 후 인건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임의의 기준이 아닌 「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에 의거 시간당 최저임금을 보장토록 하고 있으며, 고용 및 산재보험을 또한 해마다의 고시요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장비를 이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장비임차비를 예산에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인건비를 임차비로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그러함에도, 염치읍에서는 2012년 ~ 2015년도 국토공원화 인부사역 결의시 인부임을 기준없이 임의로 책정하였으며,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법적으로 가입을 권고하고 있는 고용 및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인부사역결의를 하는 등 국토공원화 인부사역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처분지시 내용

- 염치읍장은 「최저임금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인부사역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방자재 및 공구관리 관련

가. 위법·부당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아산시 수방자재 및 민방위·소방장비의 상호 지원협력을 위한 운영 규정」에 따르면 재난응급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비축하여야 하며 수방 장비·자재를 기능 및 목적에 합당하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 및 수방 장비·자재의 망실, 훼손 등으로 인하여 가치의 하락과 성능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용 보관창고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성능저하 및 기능상실로 인하여 수방자재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수방자재를 수리 및 보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도 염치읍에서는 말목 및 염화칼슘의 경우 망실과 훼손의 우려가 있는 읍사무소부지에 부적절하게 보관하였으며, 염화칼슘의 경우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않는 등 수방자재 관리업무를 소홀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처분지시 내용

- 염치읍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수방자재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증기 수입금 관련

가. 위법·부당내용

- 「아산시 재무회계 규칙」 제89조(현금의 보관) 규정에 의하면 수입금 출납원은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개인 현금과 혼동하여 취급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또 「아산시 수입증지 조례」 제12조(계기 사용 수입금 정산) 규정에 따라 그 수입금(판매한 증지대금)을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이외의 그곳에서는 5일안에 금고에 납입하여 세입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염치읍에서는 2012년 6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민원인에게 각종 제증명을 발급하고 현금으로 수납한 계기(인증기) 수입금을 시 세입으로 조치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없이 납입 기일 안에 납입하지 않고 지연 납입한 사실이 있음.

나. 처분지시 내용

- 염치읍장은 「아산시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인증기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관련

가. 위법·부당내용

- 「아산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제4조(수당 등 지급기준)에 의해 아산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에게 월 100,000원의 참전유공자 수

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9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에 의해 관외전출자, 수령거부자, 사망자등에 대해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합니다.

- 그럼에도 사망 및 전출로 지급자격이 상실한 유공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등 대상자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처분지시 내용

- 염치읍장은 「아산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참전유공자 수당지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관외전출자에게 착오지급액을 회수 하시기 바랍니다.

□ 장수수당 지급 관련

가. 위법·부당내용

- 「아산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제4조에 의해 만85세 노인에게 1인당 월 2만원의 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6조에 의해 전출, 사망, 수령거부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2015년 장수수당 사업안내(경로장애인과-437(2015. 1. 6.))」에 의해 분기 첫월 15일 전에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사망 및 전출 등 변동이 있었음에도 수당을 지급하는 등 대상자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처분지시 내용

- 염치읍장은 「아산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장수수당 지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착오지급액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관련

가. 위법·부당내용

-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의 「제4장(장애인 편의증진)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 지침」에 의하면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자동차명의 기준에

따라 장애인 본인 명의는 ‘본인용’표지를 발급하며,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보호자용’표지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장애인과 공동명의일 경우는 지분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본인용’표지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표지 관리에 있어, 읍·면·동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신청 및 발급 사항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권 변동,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파악하여야 하고, 특히 보호자 명의의 차량일 경우는 차량소유자인 보호자의 주민등록 변동 사항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 회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주차불가표지로 발급해야 함에도 주차가능 표지로 발급하였고, 보호자용으로 발급해야 함에도 본인용 표지로 발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처분지시 내용

- 읍치읍장은 「장애인관련」을 준수하고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착오 발급된 자동차 표지를 회수하고 적정하게 재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등록증 발급 관련

가. 위법·부당내용

-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 지침」에 의하면 읍·면·동주민센터에서는 장애인 등록증 교부시 본인, 보호자 등 가족임을 확인하고 교부하며, 부득이하게 2개월 이내에 교부하지 못한 경우 3회 이상 절단·폐기하고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전송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폐공사로부터 송부 받은 복지카드등의 수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교부하기까지 이중 잠금장치가 된 금고에 보관하며 금고의 관리는 2인 이하 담당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 2개월이 지나도록 장애인등록증을 미수령하였음에도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장애인등록증을 교부하기 전까지 이중 잠금장치가 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함에도 이중 잠금장치가 아닌 곳에 보관하는 등 장애인등록증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처분지시 내용

- 영치읍장은 「장애인 복지안내(1) 지침」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장애인 등록증 발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